



김용길

미국·중국과의 FTA 활용 방향 및 정책적 제언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한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중국으로부터도 완벽한 보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설비투자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정책의 실행, 통상 마찰에 적극적인 대응,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민간기업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새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다.

김용길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원광대학교 민사법무센터장
- 한국관세학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대한중재인협회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 한국중재학회 수석부회장
- 국회 입법지원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 위원



급박한 우리 무역환경

최근 우리나라는 심정적으로 가장 큰 우방으로 생각해왔던 미국으로부터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하여 커다란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중국으로부터도 완벽한 보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안보상황과 경제상황은 우리나라가 6·25사변에 따른 휴전협정을 한 이후에 발생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발언과 북한의 6차 핵실험, 기업의 역동성 둔화 등으로 대내외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세계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의 WTO체제가 과거의 GATT체제보다 더 확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자원의 극빈국으로서 수입과 수출 등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GATT와 WTO체제의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다.

FTA 체결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양자 간의 지역협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요 무역국가들과 FTA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선 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대외 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에 FTA를 선제적으로 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의 이웃 국가들인 경쟁상대국들을 살펴봐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특히 1992년 EU의 출범 및 1994년 NA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체결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으로는 국가의 무역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세계 흐름에 맞추어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자유화에 대한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세계 각국과 많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 선도국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선진 경제체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FTA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FTA를 제쳐두고 국가경쟁력과 산업경쟁력 등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수출은 금년 2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하는 등 큰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에는 3년 만에 다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사상 최초로 세계 5대 수출국 반열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이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설비투자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정책의 실행, 통상 마찰에 적극적인 대응,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민간기업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새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FTA 활용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국과의 FTA 활용 방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공약했던 내용들을 급격히 이행하자 세계 각국이 경악하고 있다.

즉 통상·무역에 대한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무장관과 국가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미 무역 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 USTR) 대표 등에 강경 일변도의

보호무역주의자들로 가득 채웠고,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를 신설함으로써 보호무역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 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 초점을 둔 NAFTA 재협상과 미·일간 FTA 그리고 한·미FTA 등의 성과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하여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TPP 탈퇴, 대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국경세 부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과 동시에 협상 개시 당시에 논의되지 않았던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와 금융서비스, 그리고 지식재산권, 규제관행, 통관절차, 위생과 검역, 노동 및 환경 이슈, 협정의 집행(enforcement) 등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하여 재협상을 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4월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나 종료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을

전후로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기는커녕 한국 정부를 더욱 압박하면서, 한·미 FTA의 폐기를 거론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9월 5일에 멕시코시티 기자 회견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 협상의 논의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한국 협정에 약간의

개정(some amendments)을 바란다”고 함으로써 대통령과 각료가 서로 치고 빠지는 냉온탕 전략·전술의 행태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따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협상에 대한 우리 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우리 산업연구원(KIET)이 금년 6월 1일에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나타내는 교역국을 대상으로 FTA 재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한-미간에는 관세인하가 상당히 진전되어 FTA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재협상이나 폐기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전략적인 대비를 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 회피라든지 공장들의 미국 진출의 검토와 동시에 우리와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및 제후관계 강화 등 전술적인 실행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보면에서도 태평양을 끼고 있는 극동아시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을 보다 깊이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상문제와 북한과 연계된 안보문제 등 투트랙을 절묘하게 조화시킴으로써 공통 의제를 발굴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관세 부활 등을 통하여 트럼프의 공화당에게 지지를 준 농업지역주의를 이용한다면 트럼프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문제삼는 대한국의 무역적자는 양국 교역구조의 상보성과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약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즉 한미간의 교역관계는 보완성이 크며, 특히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부진한 품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재협상을 대비하여 실효성있는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의 재협상은 국가가 관세나 수입 할당제 등의 방법으로 대외 무역에 간섭하는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과 상품분야의 개방들을 추가로 논의함으로써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볼 때 무역수지 불균형이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라든지 무역수지를 지킬 수 있는 논리나 전략을 세우는 한편, 무역장벽의 완화에 대비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과의 FTA활용 전망

최근 중국과의 교역은 사드(THAAD)배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주한 미군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포대의 배치가 합의된 이후에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국내외적으로 과열되었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사드배치가 합의된 이후 지난 14개월간 화장품 등 중국 소비관련 주식의 시가총액이 20조원 이상 증발하였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 10개사의 시가총액은 9월 8일을 기준으로 44조 890억 원으로, 사드배치를 발표하기 전인 2016년 7월7일과 비교하면 17조 7천여억 원 줄어들었고, 특히 9월 7일에 사드 발사대 4기를 배치하자 중국의 보복에 대한 역풍으로 9월 8일 하루 동안에 위 10개사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여억 원이나 감소했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 당시인 1992년도만 해도 양국의 경제 및 무역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오늘날 중국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8배 이상, 수출규모는 4.3배 이상으로 고속 성장하였다. 규모의 절대적인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산업 및 무역의 구조면에서도 고도화를 이룸으로써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교역상품구조가 비슷해지고 있어서 세계 시장에서 양국 사이에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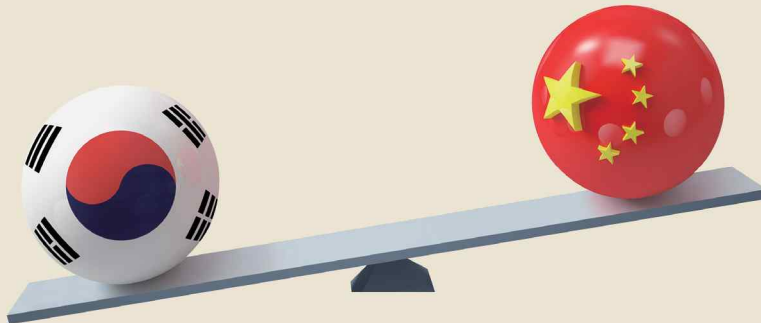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에서 대외 개방의 확대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랴오닝성, 충칭시, 후베이성 등 7개 자유무역구를 신설하고 무역 단일창구 설립 등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유무역구는 중국의 중서 지역 및 동북 지역의 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이며, 특히 충칭시의 경우는 자유무역구에서 무역 활성화, 투자

자유화, 금융국제화 등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가능한 산업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해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양국의 교역규모에서 상대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고 중국도 우리 최대의 수출입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지 말고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사드배치로 인한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한 투자가 미미 하였으나 서비스 무역규모는 양국간에 급성장하여 왔는데 특히 여행서비스는 그동안 한국이 많은 흑자를 시현 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양국 사이의 산업관계는 시초에 경제발달의 과정상 중국과 수직적 보완관계를 가져왔지만 점차 수평적 분업 및 경쟁관계로 변화되어 왔으며, 우리가 계속 발전하지 않는다면 장래에는 경쟁관계가 더욱 격화되어 오히려 한국이 수직적 보완관계에 하부구조를 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 상품의 디자인이나 기능 또는 성능을 보다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다양하고 다각적인 투자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양국 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홍보 등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드문제로 양국 사이에 외교적인 마찰이 심각하지만 사드배치를 완료한 상황에서 가야할 길이 바쁜 중국도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외교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중국 군부나 일반시민들 사이에 아직도 중공군으로 6·25에 참전한 군인들과 그 자손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양국은 WTO와 한·중 FTA 그리고 관련 법제 등 무역 및 투자규범을 폭넓게 이해하고, 준수·이행토록 상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중국은 국책사업인 '일대일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해외기업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대외개방에 대한 확대정책을 펴고자 하는 바, 중국의 주요한 FTA 체결국이며 최대 교역국인 한국과의 FTA 성과가 앞으로 중국의 대외정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지렛대인 동시에 담보로 여겨져서 제3국들의 판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최근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천명하였으므로 이를 기회로 학술분야나 기술연구 분야 그리고 민간기업 차원에서 빈번하게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정책적 제언

오늘날 우리는 FTA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좋은 싫든 외국과의 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역을 진흥하기 위하여 FTA를 잘 인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즉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향후에 외국과의 물품이나 서비스 등의 교역이 없이 거의 살아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FTA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은 거의 무감각하므로 FTA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관세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세분야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지식재산권의 국경조치

WTO 지식재산권 보호규정 (TRIPS)은 통관 절차에서 각국의 세관 등 집행기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전반의 보호에 관한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집행절차 및 분쟁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위조품 생산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있어서 진품과의 구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능적이며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입되는 지식재산권을 등록시키고 이를 전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즉각 통지함으로써 단속하는 동시에 지역별 세관의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로 일관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즉 시스템에 의한 집행정보의 일체화로 통관 물품과 관련 기업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각 세관이 위조상품의 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수출지원 서비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 상대 수출국의 관세제도나 비관세장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상대국 세관에서 통관을 시키지 못하거나 관세를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FTA체결로 인하여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체결국마다 상이한 FTA 체결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FTA에 대한 인식

정부는 관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FTA업무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애정을 가질 것이 요망된다.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이 관세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하여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FTA 시대에 정작 중요한 것은 FTA 이행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 및 대처방안의 준비로, 이를 잘 해결하여야만 좋은 성과를 얻게될 것이다. 따라서 FTA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한층 더 제고될 필요가 있다.

❖ 국토보안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에 자국 내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토안보를 위하여 대대적인 정책변화를 추구하여 왔다. 우리도 관세청이 물품의 국경간 이동에 관하여 그 접경지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보안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과의 교역에 대한 관세를 징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더하여 대테러 및 국가를 위협에 빠트릴 수 있는 마약, 무기, 화공약품, 가스 등의 물품의 반출입과 불순한 목적을 위한 물자의 입출국을 관리하고, 그러한 관련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과 기반시설 보호 능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